

대공황에 대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 두 열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The Great Depression in High School Social Science Textbooks:
Critiques and Suggestions

Duol Kim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김두열: (e-mail) duolkim@kdi.re.kr, (address) Korea Development Institute, 49 Hoegiro, Dongdaemun-Gu, Seoul, Korea

- Key Word: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뉴딜(New Deal),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High School Social Science Textbook), 주류 해석(Mainstream View)
- JEL code: N00, N21, A10
- Received: 2007. 11. 5 • Referee Process Started: 2007. 11. 15
- Referee Reports Completed: 2008. 6. 4

ABSTRACT

The Great Depress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conomic incidents in the twentieth century. A significant and long-lasting impact of this event is the rise of the government intervention to the economy. Under the catastrophic downturn of the economic condition worldwide, people required their government to play an active role for economic recovery, and this *mentalité* prolonged even after the Second World War.

Social science textbooks taught at Korean high schools mostly referred to the Great Depression for explaining the reason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economy. However, the mainstream view commonly found in the textbooks provides a misleading theological interpretation. It argues that inherent flaws of the market economy causes over-production/under-consumption, and that this mismatch ends up with economic crisis. The chaotic situation was resolved by substitution of the governments for the market, and the New Deal was introduced as the monumental example (*'laissez-faire* economy → over-production → the Great Depression → government intervention → economic recovery').

Based on economic historians' researches for past three decades, I argue that this mainstream view commits the fallacy of ex-post justification. Unlike what the mainstream view claims, the Great Depression was neither the result of the 'market failure', nor the recovery from the Great Depression but was due to successful government policies.

For substantiating this claim, I suggest three points. First, blaming the weakness or instability of the market economy as the cause of the Great Depression is groundless. Unlike what the textbooks describe, the rise of the U.S. stock price during the 1920s cannot be said as a bubble, and there was no sign of under-consumption during the 1920s. On the contrary, a new consensus emerging from the 1980s among economic historians illustrates that the Great Depression was originated from 'the government failure' rather than from the 'market failure'. Policymakers of European countries tried to return to the gold standard regime before the First World War, but discrepancies between this policy and the reality made the world economy vulnerable.

Second, the mainstream view identifies the New Deal as Keynesian interventionism and glorifies it for saving the U.S. economy from the crisis. However, this argument is not true. The New Deal was not Keynesian at all. What the U.S. government actually tried was not macroeconomic stabilization but price and quantity control. In addition, New Deal did not brought about economic recovery that people generally believe. Even after the New Deal, industrial production or employment level remained quite low until

ABSTRACT

the late 1930s. Lastly, studies on individual New Deal policies show that they did not work as they were intended. For example, the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increased unemployment, and 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expelled tenants from their land.

Third, the mainstream view characterizes the economic order before the Great Depression as *laissez-faire*, and it tends to attribute all the vice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era to the uncontrolled market economy. However, historical studies show that various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period such as inequality problems, child labor, or environmental problems cannot be simply ascribed to the problems of the market economy.

In conclusion, the remedy for all these problems in high school textbooks is not to use the Great Depression as an example showing the weakness of the market economy. The Great Depression should be introduced simply as a historical momentum that had initiated the growth of government intervention. This reform of high school textbooks is imperative for enhancing the right understanding of economy and history.

대공황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현재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들은 근대 경제의 형성과 관련해서 대공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대공황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들을 분석해 보면, 부실한 논리 전개나 틀린 사실의 수록, 나아가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표현들을 실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궁극적으로는 교과서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공황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즉 자유방

임주의 혹은 시장의 본원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과잉생산이 초래되어 대공황이 발생하였으며, 국가개입을 통해 대공황이 해소되었다는 해석 자체가 경제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사회와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의 함양이라는 사회교과의 목적을 위해서는 대공황에 대한 서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1. 서론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은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다. 1930년을 전후로 시작된 급격하고도 장기적인 경기침체는 당시를 살았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과 굶주림으로 몰고 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갖은 노력들 속에서 배태된 수많은 정책과 제도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¹⁾

대공황이 가져온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가장 뚜렷한 것 중 하나가 국가의 경제개입 확대이다. 전쟁에 버금가는 경제적 비상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의 적극적 노력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이에 부응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다. 대공황에 대한 사람들의 집단적 기억은 이후 국가의 경제개입에 대한 국민들의 허용 한도를 대폭 확장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정부가 소득분배, 사회복지, 경기안정화 등에 폭넓게 간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

서 중 상당수가 이러한 측면에 주목해서 대공황을 국가와 경제 간의 관계를 변화시킨 중요한 역사적 계기로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사회과 교과서들에 담겨 있는 대공황에 대한 주류 해석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시장개입 증가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대공황에 대한 목적론적 역사관으로 나아간다. 즉, 대공황은 시장경제의 본원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이며, 정부의 노력에 의한 대공황으로부터의 회복은 국가의 경제개입이 유효하다는 점 혹은 ‘혼합경제’ 또는 ‘수정자본주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상과 같은 주류 해석이 논리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대공황에 대한 경제사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비추어 볼 때, 고등학교 교과서의 주류 해석은 대공황의 원인과 회복과정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역사연구 혹은 사회과학연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후적 설명(post hoc ergo propter hoc)의 오류 혹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대공황을 계기로 국가의 경제개입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방임주의 혹은 국가의 부재가 대공

1) 대공황은 흔히 영어로 The Great Slump 혹은 The Great Depression 등으로 표기되는데, 대체로 1920년대 말부터 전 세계 경제에 급속도로 파급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경기위축(great contraction)과 물가하락(great deflation) 현상을 지칭한다.

황을 야기한 것은 아니었으며, 대공황이 국가개입 증가의 계기였고 미국의 뉴딜(New Deal) 정책이 이러한 전환을 대표하긴 하지만, 뉴딜의 개별 정책들이 미국정부가 의도한 것처럼 대공황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들이 대공황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살핀 뒤에,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류 해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상세히 검토하고, 대공황에 대한 교과서 서술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경제 관련 단원 등에서 이윤 추구 행위나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사례들을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제시한 작업은 이미 여러 차례 있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에서도 대공황 관련 내용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 경우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본 작업은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다.²⁾ 이와 함께 대공황 관련 서술의 문제점이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 내용과 관련된 지적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과서들에서조차 적지 않게 나타난다는 점 역시 본 논문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즉, 시장에 대한 편향적 시각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는 교과서들 역시 대공

황에 대한 서술에서는 저자들의 역사적 지식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 서술의 문제점을 바로잡는다는 맥락에서뿐 아니라 통합 교과로서의 사회과 교과서가 어떤 방식으로 집필되어야 하는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과 교과서 분석 작업들과는 다소 궤를 달리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목적이 현행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대공황에 대한 경제사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데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보다는 고등학교 교과서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요건들, 즉 사건 혹은 사실에 대한 서술이 틀리지 않아야 한다거나, 이들에 대한 설명에 있어 가능한 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논리가 소개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교과서에 걸맞지 않은 부적절한 표현이나 서술 등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등의 원칙적인 기준을 위배하는 사례들을 지적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따라서 대공황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경향을 소개하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최소화하고, 개선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정답보다는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제

2) 예를 들어, 조병구 외(2005)를 살펴보면, 필자가 이하에서 대공황 관련 서술 중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 가운데 두 건을 언급하였을 뿐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수준의 비판일 뿐,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해석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조병구 외(2005), p.105, 153.

시하는 데 집중하기로 한다. 대공황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연구들이 이미 번역이나 국내 학자들의 작업을 통해 발간되었고 연구 동향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개괄 논문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본 논문에서 이를 반복 소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러한 접근을 택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³⁾

II. 사회과 교과서의 대공황 해석

지난 1997년 고시되고 시행되어 온 제7차 교육과정하에서 고등학교 사회교과는 사회, 경제, 정치, 역사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교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8종의 검정교과서가 발간, 사용되고 있다. 이 교재들에는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이라는 소절이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데, 여기서는 대개 산업혁명 이후 오

늘날까지의 경제사를 약 5쪽에 걸쳐 다루고 있으며, 8종의 교과서 중 6종이 이 소절에서 대개 한 쪽 내지 두 쪽에 걸쳐 대공황을 다루고 있다(표 1 참조).⁴⁾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면이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시간이나 교과서의 분량 제한, 또 교과서가 다루는 다양한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이 정도가 할애되었다는 점은 대공황이 오히려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다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대공황을 다룬 교과서들이 취한 서술 방식이나 강조점 등은 책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대공황의 원인이 무엇이며, 세계경제가 대공황으로부터 탈피한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의 역사발전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라는 세 가지 문제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은 서로 동일하며, 이 주제들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3) 1980년대 이후 대공황의 국제적 성격과 금본위제를 연결해서 설명하는 새로운 시각이 대두하였는데, 이러한 해석의 기초를 제공한 핵심 저작 중 하나인 Temin(1989)은 이현대 교수에 의해 번역되었다. 금본위제 가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새로운 시각은 이미 학계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졌고, 대학 교재 수준의 단행본으로 발간됨으로써 경제사 교육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중 유럽경제에 초점을 맞춘 Feinstein, Temin, and Toniolo(1997)와 제3세계 국가들의 경험을 다룬 Rothermund(1996)가 우리나라에도 번역 소개되었다. 양동휴 외(2000)는 대공황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을 모은 것이며, 양동휴(2006)는 대공황에 대한 경제사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를 포괄적으로 정리, 소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공황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반영해서 대공황 관련 주요 저작들이 상당수 번역되었다. 대공황 당시의 사회상을 기자의 시각에서 기록한 Allen(1931), 대공황에 대한 전통적 시각을 대표하는 고전적 저작인 Galbraith(1954), 금융공황에 대한 대표적 이론서인 Kindleberger(1978), 그리고 동 저자가 대공황을 역사적으로 분석한 Kindleberger(1986) 등이 우리말로 번역 소개되어 있다.

4) <부록>에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교과서 집필에 대한 지침 분석을 통해, 여러 교과서들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이라는 동일한 제목의 장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대공황을 다루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표 1> 사회과 교과서의 대공황 서술

(1) 사회교과서

	대공황의 원인	대공황의 진행	대공황으로부터의 탈피	비고
김주환 외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 1차 대전 이후의 과잉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딜 정책 농업조정법, 국가산업부흥법, 테네시 계곡의 개발, 와그너법, 사회보장법 독일, 이탈리아 및 일본은 대외침략전쟁으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공황을 다루지 않음 국가개입의 증가를 보 통선거제 도입의 결과로만 설명
김재한 외 (2002)	p.193			
박종희 외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방임주의 주식투기, 과잉생산, 인위적 가격정책, 제한 없는 자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시장 붕괴 은행파산 공장폐쇄, 실업 미국공황의 유럽 파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딜 정책 생산량과 가격조절, 대규모 공공사업, 노동조합활동 강화, 사회보장법 도입 	
손봉호 외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방임경제의 모순 공급과잉 (미국의 기업인들이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습관적으로 투자를 늘린 결과 대공황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하락 은행파산 생산감소와 실업 세계교역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딜 정책 “대공황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나라들은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대외침략에 나서게 되었다.” 	

(1) 사회교과서(계속)

	대공황의 원인	대공황의 진행	대공황으로부터의 탈피	비 고
오경섭 외 (2002) pp.173~1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방임 • 과잉생산/과소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폭락 • 은행파산 • 기업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딜 정책 • 생산량 조절을 통한 가격 조절, 대규모 공공사업, 노동조합 강화, 사회보장 확충, 최저임금제, 실업수당 지급, 빈민구제 	
최병모 외 (2002) p.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공황을 다루지 않음 •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설명하면서 뉴딜 정책을 사례로 제시
허우공 외 (2003) p.170, 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력 과잉에 따른 생산과 소비 간의 균형 붕괴(p.170) • 과소소비(p.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폭락 • 은행파산 • 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딜 정책을 가장 체계적인 형태로 소개하는 도표를 제공
황만익 외 (2002) p.1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방임정책(과제 1,2) • 추가폭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불균형 • 생산감소 및 실업 • 소득불평등 심화 • 미국공황의 세계 파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인 언급은 없음 (과제 3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질의) 	

(2) 경제교과서

	대공황의 원인	대공황의 진행	대공황으로부터의 탈피	비고
김진영 외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폭락 • ‘보이지 않는 손’(열린 과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폭락 • 생산감소와 실업 • 은행파산 • 보호무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인즈의 이론 소개
오영수 외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공황을 다루지 않음
윤동균 외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잉생산과 대량실업 • 빈부격차 • 노사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딜 정책 	
전홍렬 외 (2003)	p.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공황에 대한 언급만 있고 대공황 자체를 다루지는 않음
조도근 외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폭락 • 유효수요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감소와 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딜 정책 • 대규모 공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정책을 다루는 장에서 사례로 소개

(3) 세계사 교과서

김은숙 외 (2003)	pp.321~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주식가격 폭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기업파산, 해외무역 쇠퇴, 실업 증가, 금융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주의 무역정책(블록 경제), 뉴딜 정책
오금성 외 (2003)	pp.272~2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과잉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공장파산, 농산물 가격 하락, 실업 	
오창훈 외 (2003)	pp.306~3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시장기능의 상실 • 파업투쟁, 과잉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딜정책

주류 해석이라 부를 만한 뚜렷한 유사성이 보인다.

우선 대공황의 원인으로는 시장경제 자체의 본원적 취약성이 지적된다. 경기 침체라는 것이 유효수요의 부족, 혹은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따르자면 과잉생산/과소소비의 결과인데, 유효수요의 부족은 시장경제의 태생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박종희 외(2003)는 19세기를 자유방임주의 경제질서의 시기로 규정한 뒤, 19세기 말에 이르러 자유방임적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자 대공황이 발생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⁵⁾ 또 황만익 외(2002)의 경우는 본문에서 “자유경쟁에 의한 무계획적인 생산은 생산과잉을 초래하여 주기적인 경제위기를 발생시켰다”고 서술한 뒤, 탐구활동에서 대공황을 소개하면서 ‘무계획적 생산’이 대공황의 원인임을 유추하도록 짜여져 있다.⁶⁾

이처럼 시장경제의 취약성이 유효수요의 부족을 가져와서 대공황을 야기하였다는 설명에 연이어 대공황으로부터의 회복이 국가의 경제개입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명제가 제시된다. 특히 1933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뉴딜 정책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계기가 된 선구적

정책으로 소개된다. 테네시 강 개발계획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공공사업,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AAA), 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NIRA)과 빈민구제정책 등이 침체된 유효수요를 증진시켜 경제를 회복시켰다는 것이다.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국가의 광범위한 개입에 의해 유지 가능하다고 서술함으로써 대공황이 소위 ‘수정자본주의’ 혹은 ‘혼합경제’의 시발점이었음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관점은 “대공황으로 자유방임 경제의 모순이 방치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됨으로써 수정자본주의 정책이 등장하였다.”라는 손봉호 외(2002)의 언명 등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⁷⁾

물론 이상과 같은 주류 해석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 서술을 제시한 교과서도 있다. 예를 들어, 허우궁 외(2003)는 시장의 취약성과 직접 연관짓지 않은 채로 공급과잉의 원천을 설명하고 있다. 또 손봉호 외(2002)와 김주환 외(2002)는 주류 해석과 동일한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계기를 언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서 다수 교과서가 채택하고 있는 관점을 교사들이 소개하리

5) 박종희 외(2003), p.174.

6) 황만익 외(2002), p.179. 이 외에도 오경섭 외(2002), p.173은 대공황에 대한 예시문을 제시한 뒤, “대공황이 일어난 원인을 자유 방임주의 사상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자유방임주의가 대공황의 원인이라는 답을 유도하고 있다.

7) 손봉호 외(2002), p.170.

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류 해석은 소수 견해를 담은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가르쳐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공황에 대한 사회교과서의 주류 해석은 사회과 선택과목인 경제교과서와 세계사교과서에서도 나타난다. 5개 경제교과서 가운데 3개가 대공황을 다루고 있는데, 내용은 사회교과서들과 대동소이하다. 예를 들어, 김진영 외(2003)는 대공황의 상황을 서술한 뒤 “보이지 않는 손이 대공황이라는 경제적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 보자”는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주류 해석에 입각한 결론을 유도한다.⁸⁾ 윤동균 외(2004)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가 대공황이었다고 소개한 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⁹⁾ 세계사교과서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오창훈 외(2003)는 공황에 대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과잉생산과 과소소비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불황을 말한다. 이는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시장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시장기능의 상실로 인해 공황이 발생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으

며,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지적한다.¹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들이 채택한 대공황에 대한 주류 해석은 ‘자유방임주의 → 과잉생산/과소소비 → 대공황 → 정부개입 → 경기회복’이라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대공황에 대한 목적론적 역사관은 사실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시각이라기보다는 대공황이 발생한 1930년대로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지던 전통해석이다. 대공황을 자본주의 몰락의 시현으로 여겼던 사회주의자들의 생각뿐 아니라 유효수요의 부족이 자본주의 경제의 본원적 문제라고 보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경기안정화 정책을 주창한 존 메이나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사상 역시 이런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오늘날 경제적 보수주의의 시조 중 하나로 여겨지는 조셉 슈페터(Joseph Schumpeter) 역시 대공황 등을 목도하면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전환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믿었다.¹¹⁾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진행된 대공황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은 전통해석이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사실들

8) 김진영 외(2003), p.41.

9) 윤동균 외(2004), p.39.

10) 오창훈 외(2003), pp.306~307.

11) Schumpeter(1942).

을 많이 밝혀 놓았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교재의 형태로 정리되어 대학에서 강의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주요 문헌들이 이미 번역 소개되어 있다. 아울러 국내 연구자들에 의한 대공황 관련 연구논문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국내외의 연구를 섭렵한 문헌 개괄 논문도 나와 있다.¹²⁾ 따라서 이러한 연구 성과를 고등학교 교과서 집필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경제사 연구 성과에 비추어 대공황의 원인과 회복과정에 대한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단,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잘못된 사실 소개, 비논리적인 역사해석, 그리고 부적절한 표현방식 등 고등학교 교과서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Ⅲ. 대공황에 대한 교과서 주류 해석의 문제점

대공황에 대한 교과서 주류 해석의 문제점을 다루기 위해서는 크게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왜곡된 소개, 대공황의 원인

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리고 대공황의 회복과정에 대한 서술의 오류라는 세 영역을 검토해야 한다. 이 중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내용은 대개 산업혁명처럼 대공황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은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편이상 대공황의 원인과 회복과정에 대한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그 후에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을 다루기로 한다.

1. 대공황의 원인

가. 사회과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사회과 교과서의 서술은 크게 두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대공황이 자유방임주의적 시장경제가 필연적으로 초래한 결과라는 일반론만을 서술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오경섭 외(2002)는 “.....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유방임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은 공황을 초래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김주환 외 (2002)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생산과잉으로 1929년 미국에서 시작한 대공황이 전 세계로 파급되어 세계 경제 대

12) 주 3) 참조.

공황이 발생하였다. 수요와 공급의 조화를 오로지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존하였던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제시함으로써, 앞서 소개한 ‘자유방임주의 → 과잉생산/과소소비 → 대공황’이라는 전통 해석의 뼈대만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¹³⁾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타당성 여부를 떠나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왜 자유방임주의가 과잉생산을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공황이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 경제체제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시장에서 수요과 공급이 불일치해서 공급과잉이나 수요과잉이 발생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인데, 왜 1930년에는 과잉공급이 대공황과 같은 심각한 경기침체로 귀결되었는가에 대해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교과서들은 이처럼 과잉공급만 단순히 언급하는 것을 넘어서, 시장경제에 과잉공급이 발생한 원인을 지적하고자 시도한다. 손봉호 외(2002)는 “제1차 세계 대전 중 유럽에 물자를 팔아 이익을 남기

던 미국 기업인들은 전쟁이 끝나고 세계 시장이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투자를 늘렸으며, 결국 1929년에 공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과잉생산의 원인을 기업가들의 행태로부터 도출한다. 그러나 기업가들이 ‘습관적으로 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과잉생산이 발생했다는 설명은 아무리 보아도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불성실한 서술이다.

윤동균 외(2004)는 19세기 말에 자유방임주의적 시장경제에 구조적 문제들이 누적되고 있었고 이것이 대공황을 초래하였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즉,

“…… 무제한적인 경제 활동의 자유는 소득의 편중 현상을 가져와 …… (중략) …… 그리고 더 많은 이익 추구를 위한 독점 기업이 생겨나면서 …… (중략) ……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충격을 준 사건은 1930년대의 대공황이었다. ……”

라고 기술하고 있다.¹⁴⁾ 여기서도 소득불평등과 독점기업의 등장을 자본주의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것이 대공황의 원인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독점기업 등장의 경우, 왜 독점기업이

13) 오경섭 외(2002), p.173. 김주환 외(2002), p.190. 이 외에도 허우궁 외(2003), p.170은 “1920년대 말에 이르러 미국 경제는 농업과 공업 부문에서의 생산력 과잉으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깨지고, 주가가 폭락하는 불황을 맞이하였다.”라고 서술함으로써 유사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또 앞서 언급한 박종희 외(2003)도 유사한 사례이다).

14) 윤동균 외(2004), p.39와 박종희 외(2003), p.174도 유사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나 소수 과점기업들의 등장이 경쟁시장과 비교해서 과잉생산과 공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지가 불분명하다.¹⁵⁾ 만일 독점기업이나 담합에 성공한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한다면, 이들은 경쟁시장에서 받는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통제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시장에서보다 적은 수량을 판매할 것이고, 이는 과잉공급과는 반대 현상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기업의 존재하에서도 과잉공급이 일어난다는 것은 독점기업이 경쟁업체 등으로 인해 독점적 지위를 잃거나 과점기업 간의 담합이 붕괴했기 때문일 텐데, 이것은 독점기업의 시장지배로 인해 시장구조에 변화가 생겼다는 전제를 위배한다.

소득불평등에 대해서 위의 교과서들은 단순히 언급만 했지만, 허우궁 외(2003)는 이 점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르면,

“1920년대는 미국 경제의 번영과 호황의 시기였지만 농업부문은 달랐다. 농부들은 몇 년간 지속된 과잉 생산과 낮은 농산물 가격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인구의 반 이

상을 차지하고 있던 농부와 비숙련 노동자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서, 호황기 동안에 투자 확대로 늘어난 많은 상품들을 구매할 여력이 없게 된 것이다.”¹⁶⁾

라고 설명한다. 이 서술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업부문의 과잉생산과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이 농업부문 소득의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과잉생산/과소소비를 유발하고 공황으로 귀결되었다는 명제를 제시한다. 이 짧은 서술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려면 상당히 긴 지면이 필요한데, 가장 핵심적인 오류만 지적한다면, 그것은 1920년대에 과소소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20년대에 총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GNP 대비 비중도 1920년대 후반의 경우 70%를 넘는 수준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¹⁷⁾ 아울러 1920년대에 소득불평등도가 상승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공황을 초래할 정도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¹⁸⁾

결국 구조적인 과잉생산/과소소비로 대공황 발발을 설명하는 교과서들의 해석은 논리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평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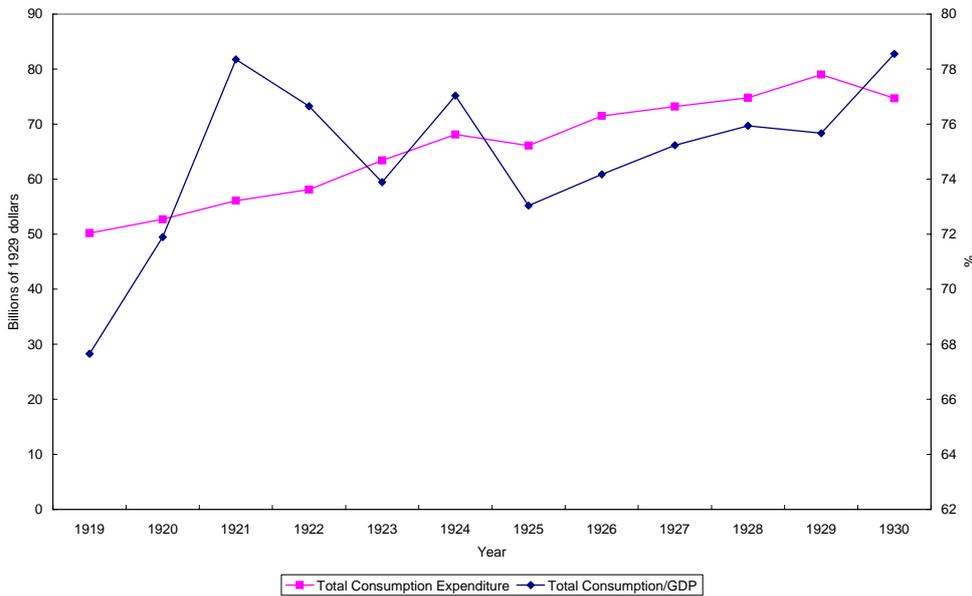
15) ‘독점자본주의’라는 개념은 교과서에 수록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는 조병구 외(2005), pp.153~154 참조.

16) 허우궁 외(2003), p.229.

17) 총소비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Temin(1976), pp.62~83 참조.

18) 양동휴(2006), p.22.

[Figure 1]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The United States 1919–1930



Source: Temin(1976), p.4.

교과서 서술상의 문제, 즉 과잉생산이론을 짧은 지면에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한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1920년대의 총소비 추이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과잉생산/과소소비이론의 문제는 하나의 설명체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실과의 정합성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격미달의 논리이다. 따라서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서술을 개선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 작업이며, 자구나 표현만을 고치는 사소한 것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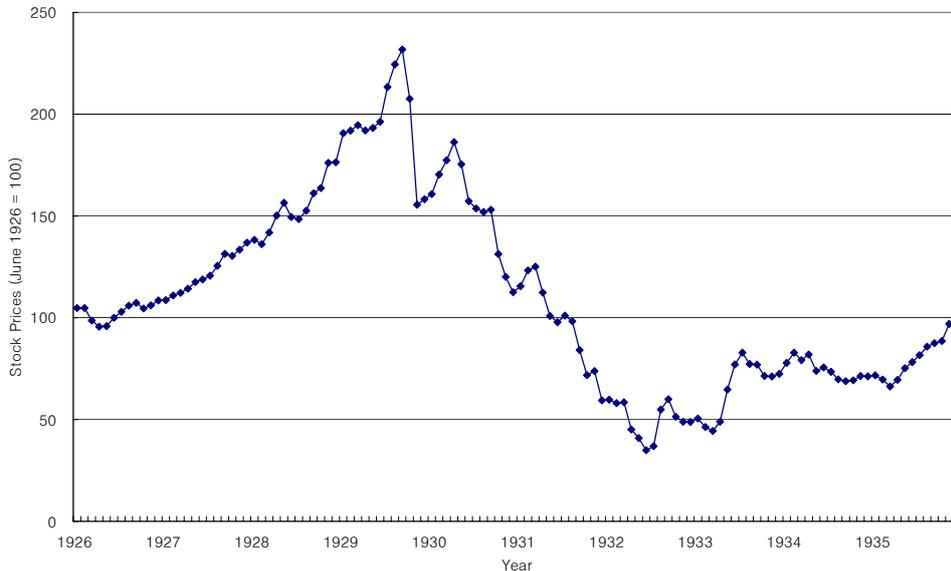
대경제의 발전에서 대공황이라는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의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한데, 이하에 제시되는 기존연구 검토는 이러한 작업의 길잡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대공황 발생의 원인

대공황은 왜 발생하였을까?19)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 대답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공황과 같은 급작스런 경기침체와 물가하락

19) 대공황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로는 Kindleberger(1986), Temin(1989, 2000), Eichengreen(1992a, b), 양동휴(2006) 등을 참조

[Figure 2] Standard and Poor's Stock Price Index of the United States, 1926-1935



Source: Sutch(2006), Vol. 3, pp.126~127.

현상은 공급과 수요 중 수요 측의 위축에 의해 촉발되는데, 대공황 당시 유효수요 감소의 원천에 대한 Peter Temin의 포괄적인 분석에 따르면, 1922년이나 1937년 등 인접한 다른 경기침체들과 비교해 볼 때 1929년에는 가계소비, 투자, 정부지출, 해외무역 가운데 가계소비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감소한 부문이었다.²⁰⁾ 가계 소비를 감소시킨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모든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1929년의 주식가격 폭락이다. 대공황을 다룬 모든 사회과 교과서들은 대공황의 시발점이 1929년 10월 미국의 주가

폭락임을 언급하고 있으며, 교과서에 따라서는 1929년 당시의 주식시장이 1920년대의 경기과열을 반영해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좀더 명확히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당시의 미국의 주가지수를 보면, 1926년부터 1929년까지 주가지수가 2배 가량 상승하였다가 1935년까지 계속 하락해서 1929년 수준의 25% 수준까지 떨어졌다(그림 2 참조). 이 같은 양상은 1929년까지의 주가상승이 투기에 의한 거품이었고, 거품의 붕괴가 경기침체로 연결되었다는 추론을 낳지만, 1920년대 실물부문의 장기호황을 고려해

20) Temin(1976).

볼 때 같은 기간 동안의 주시가격 상승을 거품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주가폭락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는 왜 주식시장 폭락이 급격한 소비 위축을 초래하였는지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설명은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²¹⁾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들은 대공황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합의를 창출하였다. 이 새로운 해석의 핵심은 대공황을 미국에서 발생해서 다른 나라로 확산된 일국적 현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국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²²⁾ 즉, 대공황의 시발점을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유례 없는 충격으로 보고, 각국 정부들의 정책적 오류로 인해 경제구조가 취약해진 결과 발생한, 필연적이지 아니라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리고 ‘시장 실패’가 아닌 ‘정부 실패’의 산물로 해석한다.

정책적 오류의 핵심으로 지적되는 것

은 금본위제적 세계관(Gold Standard Regime) 혹은 금본위제에 대한 정책당국자들의 집착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각국 정부들은 국내외 통화, 금융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본위제를 근간으로 삼았다. 즉, 국내 통화량은 중앙은행의 금보유량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국가 간의 무역 및 자본거래와 관련된 결제 역시 기본적으로 금의 유출입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국 중앙은행들 간의 신뢰와 협조(credibility and coordination)가 중요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 동안 각국이 전비조달을 위해 화폐발행을 급격히 증대시킨 결과, 이러한 국제경제질서의 기반이 붕괴된다.²³⁾ 전쟁이 종료된 뒤 각국 정부는 패전국의 배상문제 해결처럼 국가 간 협조체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전의 금본위제로 복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과 이자율 등을 무리하게 조정하였는데, 이것이 결국 자본의 급격한 국가 간 이동을 야기하여 은행의 연쇄 도산과 실물부문의 생산 감소를 초래하였다.²⁴⁾

21) 예를 들어, Romer(1990)는 주식시장 폭락이 불확실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내구재 소비 감소를 가져와서 경기침체를 가져왔다는 전과 경로를 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 역시 기대 변화라는 요인을 입증하는 데에는 더 많은 자료와 입증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22) 유효수요 감소의 원천과 관련된 소위 Temin 논쟁이라고 불리는 통화주의자와 케인즈주의자들 간의 논쟁에 대해서는 Friedman and Schwartz(1963), Temin(1976) 등을 참조.

23) Kindleberger(1986) 등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 금본위제에 기반한 국제무역 및 금융 질서가 영국의 주도에 의해 가능했다는 헤게모니 이론(hegemony theory)을 제시하였는데, Eichengreen(1992a)은 이러한 전통 이론을 비판하고 신뢰와 협조가 기본 메커니즘이었음을 보여주었다.

24) Temin(1989), Eichengreen(1992a) 등이 대표적이다.

금본위제와 대공황을 연결하는 이러한 해석은 이미 주류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오늘날의 세계경제질서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 가지 부연할 것은 금본위제적 세계관과 자유방임주의 간의 관계이다. 국제결제수단인 금의 국가 간 유출입이 정부의 인위적 개입 없이도 국제무역상의 불균형을 자연스럽게 해소한다는 금본위제적 세계관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가격기구의 원활한 작동을 신뢰하는 자유방임주의의 경제관의 부분 혹은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²⁵⁾ 하지만 이러한 관련성에 기초해서 금본위제적 세계관으로 인해 대공황이 촉발, 심화되었다는 언명을 자유방임주의가 대공황을 촉발했다는 주장으로 치환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본위제적 세계관이 대공황을 촉발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자유로운 국제무역 혹은 자금 이동과 같은 시장의 작동 자체가 공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금본위제적 세계관에 집착한 정책당국자들이 환율이나 이자율 등의 책정에 있어 시장의 움직임을 교란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수행하였음을 지적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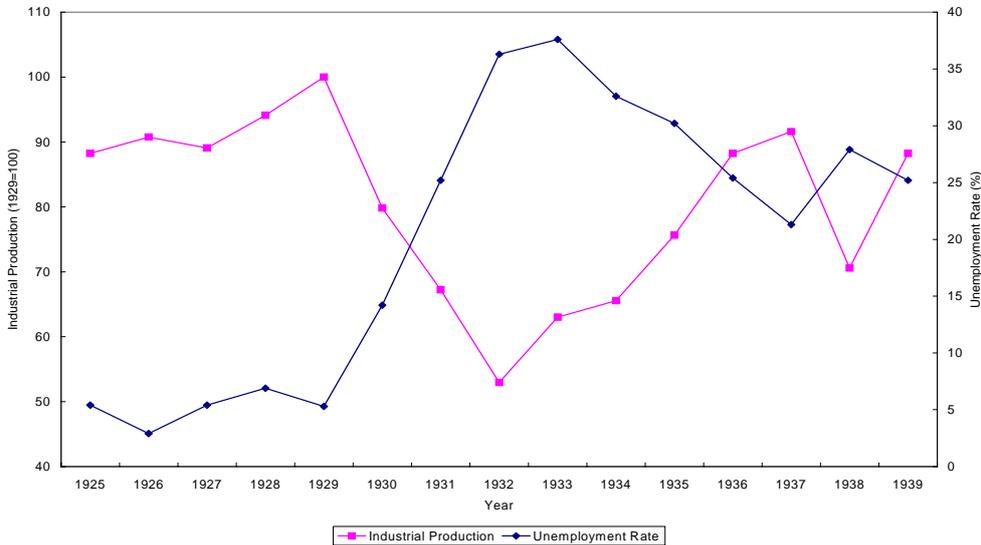
2. 뉴딜 정책과 경제회복

1929년 10월 이후 하강을 거듭하던 미국경제는 1933년에 와서야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전환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하고 뉴딜이라는 대대적인 경기회복정책을 실시한 것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대공황을 다룬 사회과 교과서들은 모두 뉴딜 정책이 미국경제를 공황으로부터 회복시킨 원동력이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교과서의 주류 해석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1933년을 정점으로 미국경제가 반등하긴 하였지만, 회복은 매우 느리고 불안정했다. [그림 3]은 대공황 전후 시기 미국의 실업률과 산업생산지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생산의 경우, 미국경제는 1936년경에 가서야 대공황 이전 수준에 도달한다. 하지만 1937년에 가서는 제2차 경기침체를 다시 맞이하기 때문에 다시 생산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업률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서 1930년대 말까지도 10% 이상의 실업률을 유지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이후에야 완전히 회복된다. 이러한 양상들은 뉴딜 정책으로 인해 미국경제가 회복되었다는 평가가 다소 지나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25) Schumpeter(1954), p.405.

[Figure 3] Industrial Production and Unemployment in Industry, the United States 1925-1936



Sources: Eichengreen and Hatton(1988), p.7; Federal Reserve System(1940).

둘째, 교과서에 따라서는 뉴딜 정책을 케인즈주의적(Keynesian) 총수요관리정책의 효시로 소개한다. 예를 들어, 조도근 외(2003)는 ‘대공황을 극복한 재정정책’이라는 읽기자료를 통해서 뉴딜정책을 “루스벨트 정부가 재정 지출의 확대를 통해 유효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불황을 타개하고 실업자를 구제한다”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⁶⁾ 심지어 김주환 외(2002)는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펼친 뉴딜 정책은 케인즈라는 한 경제학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김진영 외

(2003)는,

“..... 이러한 상황에서 케인즈는 루스벨트에게 미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와 실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경제체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정부가 경기회복정책을 실시하여 국민경제를 계획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경제체제는 혼합경제체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라고 묘사함으로써 마치 케인즈가 루스벨트에게 직접 정책조언을 했고 루스벨

26) 조도근 외(2003), p.208.

트가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²⁷⁾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선 케인즈의 직접적 영향 여부를 먼저 살펴보면, 오늘날 케인즈주의적 거시경제이론의 기초가 되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은 1937년에 출간되었으며, 1933년경에는 케인즈 스스로도 그가 이 책에서 고전학파적 사고라고 부른 사유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새로운 이론을 모색하는 단계였다.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케인즈가 직접적인 만남이나 공개서한과 같은 방식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뉴딜 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²⁸⁾

나아가 뉴딜 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다도 케인즈주의적 총수요관리정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빈민이나 실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는 구호적 성격의 지출이므로 특별히 케인지안적인 것은 아니다. 농업조정법이나 산업부흥법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농산물가격이나 임금을 높은 수준으로 통제함으로써 소득을 보전하는 가격통제정책이었기 때문에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총수요

관리정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테네시 강 유역 개발계획과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이 그나마 케인즈주의적 정책과 외관상 상당히 유사하다. 하지만 대규모 공공사업은 그 자체가 아니라 적자재정을 통해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거시적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것이며, 또 그런 맥락에서 케인즈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뉴딜 정책이 케인즈주의적 총수요관리정책이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국정부가 적자재정정책을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Brown(1956)에 따르면 1930년대 미국의 재정지출은 적자를 보이는데, 이것은 정부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세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이 점을 감안할 때 1930년대에 적극적인 적자재정지출을 통한 경기회복정책이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²⁹⁾ 이런 맥락에서 Temin은 뉴딜 정책에 대해 “그 형태나 내용 모두에서 케인즈주의적이 아니었다.”고 단언한다.³⁰⁾

셋째, 뉴딜과 경제회복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기적 연관성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 개별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대규모 공공사

27) 김주환 외(2002), p.245. 김진영 외(2003), pp.41~42.

28) Harrod(1950), pp.446~450; Hession(1984), pp.411~427; Skidelsky(1992), p.494는 케인즈가 뉴딜 정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일반적 견해에 대한 반론을 펴려하였지만, 별다른 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29) Brown(1956).

30) Temin(1989), p.107.

업이 재정지출 증가를 통해 경기회복에 기여한 정도가 미미했음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산업부흥법의 경우는 독점금지법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서 기업 간 담합을 허용하였고, 노동 관련 조항들에서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도입되었다. 산업부흥법은 1935년 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지만, 노동 관련 조항들은 이후 와그너법(Wagner Act 혹은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으로 계승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이 경기회복에 미친 영향에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산업부흥법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한 Cole and Ohanian (2002, 2004)은 기업의 담합과 노동조합의 세력 강화가 산업부흥법이 없었다면 도달할 수 있었을 경제회복 수준의 40% 밖에 달성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농업조정법은 농산물 과잉생산을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³¹⁾ 양동휴(2006)의 지적처럼 산업부흥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측면이 있지만, 이 정책 역시 많은 부작용을 수반하였다.³²⁾ 특

히 농산물 생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경작을 포기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주들은 보상을 받았지만 실제 농사를 짓던 소작농들은 더 이상 농지를 임대받지 못함으로써 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농촌에서 축출되어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기도 하였기 때문이다.³³⁾

이처럼 뉴딜의 개별 정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공황으로부터의 탈피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 미국경제의 회복이 시기적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뉴딜을 구성하는 주요 정책들은 실제로는 무기력했거나 경기회복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933년의 경기 반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앞서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금분위제 가설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어 주목받는 견해는, 미국의 금분위제 포기과 이에 따른 달러화의 평가절하 및 관세인상, 그리고 뉴딜 정책 등과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바꿈으로써, 즉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

31) 김주환 외(2002), p.192. 오창훈 외(2003)는 뉴딜 정책 중 농업조정법의 목적에 대해, “농업생산을 제한하며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유지하고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켜 농산물의 구매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농업생산을 제한할 경우 가격이 상승할 텐데, 이것이 농산물의 가격을 하락시킨다고 서술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농산물의 구매력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애시당초 농업조정법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사실 확인 없이 서술하고 있다.

32) 양동휴(2006), 4장.

33) 농업조정법이 미국 남부 면화재배지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Whatley(1983)를 참조.

를 진작시켜 경기회복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대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 가설 역시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³⁴⁾

뉴딜 정책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개입에 의한 대공황으로부터의 탈피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국가개입 확대에 따른 부정적 결과 역시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소련의 경우 스탈린하에서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유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이러한 호황의 이면에서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농업집단화 등의 과정에서 굶어 죽어야 했다. 또 독일, 일본 등 국가개입을 통해 대공황을 상대적으로 잘 극복했던 나라들이 정치적으로는 파시즘 혹은 군국주의의 길을 걸었다는 측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⁵⁾ 이처럼 대공황의 역사는 시장의 취약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논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국가개입의 폭력성이 가져올 수 있는 비극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공황의 교훈이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 확대의 필요성으로 단순히 연결되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다.

3.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서술의 문제점

앞서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서술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등학교 교과서의 주류 해석은 자유방임주의를 대공황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여기에서는 각 교과서들이 자유방임주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서술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상당수의 교과서들이 국가의 경제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자유방임주의나 시장경제를 왜곡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서술이 산업혁명과 대공황, 그리고 그 이후의 경제 발전에 대한 편향된 이해의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상 혹은 사조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를 다룬 문헌들이 대부분 언급하는 공통점들을 짚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이러한 공통요소들을 잘 압축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첫째는 “개인과 사회의 경제활동에 대해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정책 노선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가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지 개인의 활동에 간

34) Temin(1989), Temin and Wigmore(1990).

35) 대공황기 사회주의와 전체주의 간의 관련성에 대한 대표적 논의로는 Hayek(1944) 참조.

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유방임주의 사조는 19세기에 풍미하였다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퇴조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이다.³⁶⁾ 이러한 정의는 국제 사회과학사전(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에 제시된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서술 등에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³⁷⁾

이상에서 제시한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정의는 이 사상의 20세기적 계승형태로 간주되는 경제적 보수주의(Conservatism 혹은 Libertarianism)와 큰 차이가 없다. 경제학 용어를 빌리자면 국가의 역할은 국방이나 치안처럼 소위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에 가까운 재화를 생산하는데 한정해야지,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하의 논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적 견해 혹은 보수주의적 견해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와는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이다. 간혹 19세기의 자유방임주의 사상가들 가운데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극단적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주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³⁸⁾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위의 정의를 염

두에 두고 사회교과서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8종의 사회교과서들을 살펴보면 모두 자유방임주의란 단어를 한 번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본주의의 발전과 관련된 소절, 즉 대공황이 논의되는 소절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를 다루는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두 개 교과서가 자유방임주의에 대해 비교적 충실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세 개 교과서는 관련된 서술만을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세 개 교과서에서는 용어만 언급할 뿐 아무런 부연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경제교과서의 경우는 5개 가운데 2개가 자유방임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명확한 정의는 제시하지 않고 관련 서술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표 2 참조).³⁹⁾

자유방임주의의 정의를 제시한 사회교과서들의 경우, 앞서 서술한 통상적 정의에 충실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방임주의는 국가가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계약의 집행을 강제하는 데 역할을 한정해야지 경제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로 소개된다. 예를 들어, 김주환 외(2002)는 “정부는 외적의 방어나 치안 유지 등 최소한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36)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1990), v.7, pp.105~106.

37) Gordon(1968), pp.546~549.

38) 예를 들어, Gordon(1968), p.547은 Thomas Hodgskin이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결과 몇몇 학자들로부터는 무정부주의자로 분류되고 있음을 언급한다.

39) 윤동균 외(2004)의 경우는 자유방임주의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문맥상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표 2>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서술

1) 사회교과서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묘사	'자유방임주의'의 문제점
김주환 외(2002)	p.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덤 스미스(정부는 외적의 방어나 치안 유지 등 최소한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경제분야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법과 항해법 • 노동문제
김재한 외(2002)	p.1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경국가 •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배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
박종희 외(2003)	p.1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를 제시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부격차, 노동문제, 도시문제 등
손봉호 외(2002)	p.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를 제시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 경기변동
오경섭 외(2002)	p.169, 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덤 스미스(국가의 역할은 국방, 경찰, 공공시설 건설 세 가지 영역에 국한되어야 함) • “정부의 권력은 작을수록 좋고 정부가 개인의 생활이나 민간의 경제활동에 관여하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p.173) • 개인의 이익추구가 공공의 이익을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부 격차의 심화 • 환경오염
최병모 외(2002)	p.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를 제시하지 않음 	
허우궁 외(2003)	p.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덤 스미스(국가의 역할은 국방, 경찰, 공공시설 건설 세 가지 영역에 국한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생활환경 • 도시화에 따른 빈민과 주택문제
황만익 외(2002)	p.1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덤 스미스 • 경제 영역에서 국가 간섭의 최소화 •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과 빈곤, 환경, 노동문제 등 많은 문제 • 생산과잉에 따른 경제위기 → 실업, 사회적 혼란

2) 경제교과서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묘사	‘자유방임주의’의 문제점
김진영 외(2003)	p.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경국가관: “아무 것도 안 하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 • 애덤 스미스(보이지 않는 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불평등 • 독점기업의 등장 • 제국주의
오영수(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는 사용되지 않음. 	
윤동균 외(2004)	p.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는 사용되지 않음. 하지만 “무제한적 경제활동의 자유”라는 표현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불평등 • 노동문제
전홍렬 외(2003)	p.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덤 스미스(보이지 않는 손) • “이 무제한적인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 자본주의 • 경제력집중, 실업 등 자본주의의 병폐가 커짐
조도근 외(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는 사용되지 않음. 	

경제분야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사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김재한 외(2002) 역시 유사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⁴⁰⁾ 아울러 개념 제시 전후의 논의를 통해 국가가 경제활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혼합경제’나 ‘수정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개념, 때에 따라서는 정부규제와 같은 개입이 없는 순수한 시장경제라는 의미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의를 제시하지 않은 채 약간의 부연 서술만을 제공한 교과서들은 자유방임주의에 대해 왜곡된 상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김진영 외(2003)와 전홍렬 외(2003) 등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아무 것도 안 하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라는 야경 국가관” 혹은 “무제한적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 등으로 서술함으로써 자유방임주의의 요체가 국가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개입해야 한다는 원래 취지를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다. 황만익 외(2002)의 경우는 애덤 스미스가 자유방임주의의 시조임을 설명하면서 그의 언명인 것처럼 인용구의 형태로 이하의 구절을 제시한다.

“여러분은 선의의 법령과 규제로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방임하십시오.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사리(私利)라는 기름’이 ‘경제’라는 기어(gear)를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잘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치자의 다스림도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⁴¹⁾

교과서에서는 이 구절을 제시할 때 애덤 스미스의 얼굴을 삽화로 제시한 뒤, 따옴표를 이용해서 마치 그가 직접 말한 것처럼 한 뒤, 말미에 “—스미스(Smith, A.), 『국부론』(1776)”이라고 표기함으로써 마치 이 구절이 『국부론』에서 직접 인용한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부론』에 실제로 이러한 구절이 있는지는 회의적인데, 그것은 이 내용이 무정부주의에 가깝지 흔히 알려진 애덤 스미스의 사상이나 경제적 보수주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교과서 저자가 이 구절을 정말 『국부론』에서 가져왔다면, 그는 자신의 생각을 보이기 위해 자의적 취사선택을 함으로써 애덤 스미스의 사상과 자유방임주의를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⁴²⁾ 만의 하나라도 이 구절이 애덤 스미스가 아니라 교과서 저자들이

40) 김주환 외(2002), p.190. 김재한 외(2002), p.193.

41) 황만익 외(2002), p.178.

42) 만일 저자가 이 구절을 『국부론』에서 인용했다면, 반드시 인용처를 페이지까지 표시해서 제시했어야 한다. 지학사 교과서의 책 말미에는 ‘인용자료’란에 인용처의 페이지를 제시한 경우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의 경우는 인용내용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 황만익 외(2002), pp.326~327. 이 같은 잘못

지어낸 것이라면, 이것은 교과서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윤리적 문제를 범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교과서마다 자유방임주의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나 수준에 큰 차이가 있지만, 산업혁명기의 여러 가지 주요 사회문제를 자유방임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연결짓는 경향은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김주환 외(2002)의 경우,

“…… 자유방임주의적 시장 경제 활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먼저, 산업 혁명으로 숙련공의 가치가 떨어지자 임금이 크게 낮아졌다. …… 또한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미성년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작업하는 등 노동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⁴³⁾

라고 산업혁명기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자유방임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소개한다. 하지만 산업혁명기에 숙련공의 가치가 떨어진 것은 기술 변화의 결과이지, 자유방임주의 때문은 아니다. 장시간 노동이나 유소년 노동자 문제의 경우는 왜 이것이 자유방임주의와 관련이 있다

고 주장하는지가 불분명한데, 김재한 외(2002)는 열악한 노동조건이 ‘자유계약’의 불평등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즉,

“19세기를 지배한 것은 자유주의 이념이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배격하였다. 그리하여 경제분야에서는 자유방임주의가 큰 목소리를 내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경제적 관계를 규정한 것은 오직 자유로운 계약뿐이었다. 그러나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오직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결정되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계약 조건은 고용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결국 노동자는 장시간의 저임금 노동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⁴⁴⁾

전후 맥락까지 고려해 볼 때 이 교과서가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이 자유방임주의 때문이라고 이해시키려는 것은 명백하다. 앞서 제시한 김주환 외(2002)의 문단이 낮은 임금의 원천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제시하지 않은 반면,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유로운

된 인용은 거의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를 검토한 박형준(2005), p.39 역시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43) 김주환 외(2002), p.190.

44) 김재한 외(2002), p.193.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황만익 외(2002), p.177 참조.

계약'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옴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그런데 위의 논리를 살펴보면 낮은 임금의 실질적 원천은 자유로운 계약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남아둔다면'이라는 노동시장의 상황이다. 저자 스스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도 인지하지 못한 셈이다.

한걸음 물러서서 저자의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을지 유추해 보면, 아마도 저자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교섭이나 투쟁을 통해 적극적으로 적정 임금 수준을 지키거나 아니면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산업혁명 초기처럼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싶었던 듯하다. 하지만 산업혁명 초기에 노동자들이 처했던 열악한 상황이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최저임금제 같은 제도적 기반의 부재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임금의 결정에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라는 객관적 조건들이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기업가가 임금을 낮추고 싶어도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장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날 것이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또 아무리 국가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그 수준이 균형임금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임금을 향유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균형임금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강요받는 부작용이 발생한다.⁴⁵⁾

아울러 산업혁명기 영국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교과서들의 서술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 영국 산업혁명 초기에 많은 공장노동자들이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 고통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대 농촌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⁴⁶⁾ 또 1810~20년대를 전후해서는 장기적인 임금 상승 추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교과서들이 상정하는 것과는 달리 국가나 노동조합의 개입 여부보다는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 등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었다.⁴⁷⁾ 따라서 '열악한 노동환경'이 노동조합의 등장 때문에 개선된 것처럼 일반화함으로써 자유방임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

노동문제와 아울러 산업혁명기에 자유방임주의가 초래한 사회문제로 모든 교과서들이 언급하는 것이 환경오염이다.

45) 물론 이러한 논의가 19세기에 도입된 노동 관련 법안들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노동 관련 입법들이 실효를 볼 수 있었던 객관적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국가개입이 만병통치약인 양 서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46) Lindert(1994), pp.368~372.

47) Lindert(1994), pp.368~372.

아마도 이러한 언급의 배후에는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은 것이 자유방임주의 사조 때문이라는 논리가 존재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것은 자유방임주의 혹은 경제적 보수주의에 대한 피상적인 또는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자유방임주의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공기나 물의 오염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결코 정부가 해야 할 임무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⁴⁸⁾ 궁극적으로 산업혁명기에 환경오염문제가 방치된 것을 자유방임주의와 같은 특정 사상과 연결시키기보다는 환경오염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 인식 자체가 낮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처럼 산업혁명기 혹은 국가개입 확대 이전의 사회문제를 모두 자유방임주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은 심한 경우 극단적인 사실 왜곡으로까지 나아간다. 예를 들어, 법문사의 경제교과서는 대공황을 다루는 지면에서 금주법이 밀주 거래 같은 불법행위와 마피아 같은 범죄조직을 낳았음을 지적하면서, “금주령이 부정적인 효과를 낳은 이유를 자본주의의 특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자”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⁴⁹⁾ 이 질문의 의도가 금주법과 관련된 사회적 불법행위들이 자본주

의 혹은 시장경제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답을 유도하는 것임은 명확하다. 하지만 교과서 필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금주법은 국가가 개인의 소비활동을 적극적으로 통제해서 국민을 계도하려는 온정주의(paternalism) 정책의 대표적 사례이며, 이러한 정책들이 암시장처럼 자유로운 시장거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은 경제학 개론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주 제조와 마피아 같은 범죄조직들이 생긴 것을 ‘자본주의의 특성’으로부터 연역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 않는 과오이다. 1922년에 금주령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공황기에 금주령이 내려졌다.”고 서술한 심각한 오류조차도 금주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주입하는데 따른 문제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또 다른 사례로 김진영 외(2003)는 대공황을 서술하면서 “불안정한 환율, 심각한 인플레이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심각한 경기침체와 대규모의 실업 등은 시장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었다.”라고 말한 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합경제체제가 등장하였다고 서술한다.⁵⁰⁾ 하지만 이 서술이 열거한 문제들은

48) Gordon(1968), p.546.

49) 윤동균 외(2004), p.39, ‘사례탐구’.

50) 김진영 외(2003), p.41.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이한 이유 때문에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경기침체가 일어난 대공황기에는 물가가 하락하였지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존재하지 않았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 것은 1920년대 초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몇몇 나라에서 소위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이 일어난 것이 대표적인 텐데, 이는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독일의 배상문제 등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시장경제체제의 취약성 때문은 아니었다. 또 1920년대의 불안정한 환율문제는 정부의 환율정책과 정부 간 협조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도, 이것 역시 ‘시장의 문제’라고 지칭하는 것은 사실상 무고에 해당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발전과 산업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현 교과서들의 서술은 마치 18세기 후반 이후 산업화된 사회에서 발생한 모든 사회적 문제들이 시장경제에 기인한 것이라 매도하고, 이러한 비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수단으로 ‘자유방임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측면이 있다.⁵¹⁾ 이러한 서술은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등학생들의 역사 인식과 사회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

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IV. 대공황 관련 내용의 개선방안

그렇다면 대공황을 어떻게 서술하고 가르칠 것인가? 한 가지 방안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처럼 난해한 사건을 아예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김재한 외(2002)와 최병모 외(2002)는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발전을 다루는 소절에서 대공황을 아예 다루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김재한 외(2002)는 국가의 경제개입이 확대된 계기를 대공황을 배제한 상태에서 보통선거제의 도입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 인과관계의 경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류로 보인다.⁵²⁾ 한편 최병모 외(2002)의 경우는 19세기 이래로 사회보장입법의 확장을 서술하면서 대공황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뉴딜 정책이 사회보장 증가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제시한다.⁵³⁾ 하지만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지

51) 박형준 (2005), pp.34, 39-40 역시 산업혁명에 대한 현행 사회교과서의 서술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52) 김재한 외(2002), p.193.

않은 채 뉴딜 정책을 서술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결국 저자들이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대공황에 대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들과 연구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대공황에 대한 서술을 개선할 경우, 몇 가지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현재와 같이 대공황을 국가개입이 확장된 역사적 계기라는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서술 내용을 크게 고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국가개입 확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근대 경제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팽창하고 복잡해졌다. 이 같은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 제도들이 실제로 잘 작동하도록 국가의 감시, 감독 및 자원 투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 역할의 확대와 심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있지만 역사적 계기에 의해 급속도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그 계기가 대공황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적 추이를 많은 사회과 교과서들처럼 ‘시장의 본원적 불완전성’ 혹은 ‘시장의 무정부성’ 등의 해소를 위한 필연적 결과라

고 서술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제도 마련과 시장의 교환 작용을 국가가 대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경제의 성장과 국가의 역할 확대를 논함에 있어 대공황은 시장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서가 아니라,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국가가 개입할 영역이 많다는 방향으로 일반인들의 인식을 크게 바꾸었던, 그럼으로써 국가의 경제개입이 전면적으로 확대된 역사적 사건 혹은 계기로 소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이라는 소절에서 자유방임주의를 정의하고 서술하는 방식도 크게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 모든 사회과 교과서는 최소한 한 번씩 자유방임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단어는 산업혁명 시기부터 대공황 이전까지를 지배한 경제사상으로 소개된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각 교과서가 자유방임주의를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양고대사상에 등장하는 쾌락주의자들을 마치 말초적 쾌락만을 추구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대공황과 맞물려 시장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를 조장하는 이와 같은 서술은 반드시 개편되어야 한다.

53) 최병모 외(2002), p.165.

이처럼 대공황에 대한 기존 서술체계 내에서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맥락에서 활용하는 것도 사회교과서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드는 방안일 수 있다.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경제제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 중 많은 것들이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연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들을 소개할 때 대공황과 관련짓는 것은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미 소개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들 외에도 예금보험제도 같은 것들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대공황 당시 미국경제는 은행들의 연쇄 도산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화되었는데, 이 은행들 중 상당수는 사실 건전한 은행들이었으면서도 은행이 망할 경우 예금을 모두 잃어버릴 것을 염려해 급작스럽게 몰려든 예금주들의 인출 요구를 감당하지 못해 도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신용경색이 실물부문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급작스런 인출사태(bankrun)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으며,

그 결과로 예금지급을 보장하는 보험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1935년에 설립된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는 이러한 제도의 효시이며, 이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나라에서 받아들여져 각국의 금융위기를 예방 혹은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⁵⁴⁾ 국가가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의 불안요소를 차단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설명할 때 구체적인 사례로 예금보험공사를 제시하고 이 제도를 대공황이라는 맥락하에서 제시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공황은 오늘날의 세계화 움직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나 WTO 등과 같은 국제무역 관련 기구들이 다양하게 발전해 온 것은 대공황의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 바가 크다. 1930년대 경제불황이 세계를 블록경제화하고, 이것이 공황을 심화시켜 경제를 더욱 침체시켰다는 인식의 공유가 전후 자유무역협정들의 근본 사상이기 때문이다.⁵⁵⁾ 이처럼 대공황을 세계화에 대한 논의 속에서 다루는 것도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데 큰 도움

54) 이 제도는 1934년에 도입되었으나 실제 작동은 1935년 7월부터 이루어졌다. 불행히도 이 제도는 1933년 이후의 경기회복에 큰 힘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Temin(2000), p.319.

55) 물론 경제블록화가 경기침체를 실제로 초래했는가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국제무역을 축소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국내경제를 팽창시키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실제 효과가 어땠는지와는 무관하게 대공황 당시의 입법들이 남긴 집단적 기억의 효과가 끊임없이 언급되고, 정책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이 될 것이며, 세계화를 사회과목의 다섯 가지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설정한 제8차 교육과정의 방향과도 일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⁶⁾

이상과 같은 근본적 개선작업은 당연히 교육 담당 부처의 교과서 편수관들과 교과서 저자들의 몫이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얼마나 오류를 줄일 수 있는지는 상당 부분 검정위원들의 노력에도 달려 있다. 대공황의 서술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는 교과서 검정 시스템 역시 근본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 글에서 지적한 문제 중 몇몇은 대공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정위원 구성에 따라서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문제들은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검정위원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결함들이다. 특히 대공황 당시의 상황을 서술하면서 “부잣집 주인이 우유로 목욕하고 개에게 스테이크를 먹이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영양실조로 죽어갔다.”는, 정치선동전단이나 쓸 만한 문구를 버 것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한 것과 같은 경우는 교과서 저자들의 소양도 문제지만 검정위원들의 불성실이 더 크게 비판

받아야 한다.⁵⁷⁾ 검정위원 선정과 검정과정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원한다.⁵⁸⁾

V. 결 어

윈스턴 처칠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1945년까지의 기간을 ‘제2차 30년 전쟁’이라고 명명하였다.⁵⁹⁾ 처칠의 이러한 통찰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원인과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대공황은 그 자체가 낳은 유산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을 통해서 20세기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영향이 무엇인지 반추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사회과 교과서의 대공황 관련 내용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공황을 어떤 관점에서 서술하였는지 혹은 최신 연구 성과를 얼마나 충분히 반

56) 교육인적자원부(2007), p.5, 32.

57) 황만익 외(2002), p.179.

58)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작성과 교과서 검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로는 박인옥 외(2000), 조영달(2000) 등을 참조.

59) Temin(1989), p.1에서 재인용.

영하였는지와 같은 고차원적인 문제 이전에, 교과서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문제들이

제거된 좋은 내용의 교과서가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대공황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7, 1997.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4) 사회』, 2000.
-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 2000.
- 교육인적자원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7, 2007.
- 권남훈, 「고등학교 심화과정 경제관련 교과서에 대한 평가」, 『경제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2005, pp.1~26.
- 김은숙 외, 『고등학교 세계사』, (주)교학사, 2003.
- 김재한 외, 『고등학교 사회』, 법문사, 2002.
- 김주환 외, 『고등학교 사회』,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 김진영 외, 『고등학교 경제』, (주)대한교과서, 2003.
- 박인옥·조국남·최정윤·최유리, 「제7차 사회과 교과서 편찬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시민교육연구』, 31, 2000, pp.143~183
- 박종희 외, 『고등학교 사회』, (주)천재교육, 2003.
- 박형준, 「고등학교 1학년 사회의 경제 단원 내용 분석」, 『경제교육연구』, Vol. 12, No. 2, 2005, pp.27~46.
- 손봉호 외, 『고등학교 사회』, (주)두산, 2002.
- 양동휴, 『20세기 경제사』, 일조각, 2006.
- 양동휴 외, 『1930년대 세계대공황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오경섭 외, 『고등학교 사회』, (주)도서출판 디딤돌, 2002.
- 오금성 외, 『고등학교 세계사』, (주)금성출판사, 2003.
- 오영수, 『고등학교 경제』, (주)교학사, 2003.
- 오창훈 외, 『고등학교 세계사』, 지학사, 2003.
- 윤동균 외, 『고등학교 경제』, 법문사, 2004.
- 조병구 외,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경제영역 내용 검토 보고서』, 재정경제부·KDI경제정보센터, 2005.
- 전홍렬 외, 『고등학교 경제』, (주)천재교육, 2003.
- 조도근 외, 『고등학교 경제』, (주)두산, 2003.
- 조영달, 「교육과정의 정치학-7차 사회과 교육과정 결정의 참여구조」, 『시민교육연구』, 31, 2000, pp.295~317.
- 최병모 외, 『고등학교 사회』, (주)대한교과서, 2002.
- 허우궁 외, 『고등학교 사회』, (주)교학사, 2003.

황만익 외, 『고등학교 사회』, (주)지학사, 2002.

- Allen, Frederick, *Only Yesterday: An Informal History of the 1920s*, Harper & Low, 1931. [신범수 옮김, 『1929, 미국대공황』, 고려원, 1992]
- Brown, E, "Fiscal Policy in the Thirties: A Reappraisal,"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6, No. 5, 1956, pp.857~879.
- Cole, Harold and Lee Ohanian, "The U.S. and U.K. Great Depression through the Lens of Neoclassical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2, No. 2, 2002, pp.28~32.
- Cole, Harold, and Lee Ohanian, "New Deal Policies and the Persistence of the Great Depression: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2, No. 4, 2004, pp.779~816.
- Eichengreen, Barry, *Golden Fetters: The Gold Standard and the Great Depression, 1919-193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a.
- Eichengreen, Barry, "The Origins and Nature of the Great Slump Revisited," *Economic History Review*, Vol. 45, No. 2, 1992b.
- Eichengreen, Barry and T. J. Hatton (eds.), *Interwar Unemployment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8.
- Federal Reserve System, "New Federal Reserve Index of Industrial Production," *Federal Reserve Bulletin* 26, August 1940, pp.753~771.
- Feinstein, Charles, Peter Temin, and Gianni Toniolo, *The European Economy between the Wars*,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양동휴 · 박복영 · 김영완 옮김, 『대공황전후 유럽경제』, 동서문화사, 2001]
- Friedman, Milton, and Anna Schwartz,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 Princeton, 1963.
- Galbraith, John, *The Great Crash 1929*, Houghton Mifflin, 1954. [이현대 옮김, 『대폭락 1929』, 일리, 2008]
- Gordon, Scott, "Laissez-Fair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MacMillan Company and the Free Press, 1968, pp.546~549
- Harrod, Roy, *The Life of John Maynard Keynes*, London: MacMillan & Co., Ltd, 1950.
- Hayek, Friedrich, *The Road to Serf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4.
- Hession, Charles, *John Maynard Keynes: A Personal Biography of the Man Who Revolutionized Capitalism and the Way We Live*, Macmillan, 1984. [허창무 역, 『왜 아직도 케인즈인가』, 매일경제신문사, 1991]
- Kindleberger, Charles, *Manias, Panics, and Crashes*, Macmillan, 1978. [김홍식 역,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굿모닝북스, 2006]
- Kindleberger, Charles, *The World in Depress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박명섭 역, 『대공황의 세계』, 부키, 1998]

- Lindert, Peter, "Unequal Living Standards," in Roderick Floud and Donald McCloskey (eds.), *The Economic History of Britain since 1700*, Vol. 1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357~386.
- Romer, Christina, "The Great Crash and the Onset of the Great Depress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5, No. 3, 1990, pp.597~624.
- Rothermund, Dietmar, *The Global Impact of the Great Depression 1929-1939*, Routledge, 1996.
[양동휴 · 박복영 · 김영완 옮김, 『대공황의 세계적 충격』, 예지, 2003]
- Schumpeter, Joseph, *Capitalism, Socialism, Democracy*, 1942. [이상구 옮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삼성출판사, 1988]
- Schumpeter, Joseph,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London: Allen and Unwin, 1954.
- Skidelsky, Robert, *John Maynard Keynes, Vol. 2: The Economist as Saviour 1920-1937*, London: Macmillan, 1992.
- Sutch, Richard and Susan Carter (eds.),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Millennial Edition*, 5 Volu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Temin, Peter, *Did Monetary Forces Cause the Great Depression?* W.W.Norton & Co., 1976.
- Temin, Peter, *Lessons from the Great Depression*, MIT, 1989. [이현대 옮김, 『세계대공황의 교훈』, 해남, 2001]
- Temin, Peter, "The Great Depression," in Stanley Engerman and Robert Gallman (eds.),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Vol. 3, 2000, pp.301~328.
- Temin, Peter and Barrie Wigmore, "The End of One Big Deflation, 1933,"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Vol. 27, No. 4, 1990, pp.483~502.
- The New Encyclopaedia of Britannica*, 15th ed., Chicago, 1990.
- Whately, Warren C., "Labor for the Picking: The New Deal in the South,"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43, No. 4, 1983, pp.905~929.

<부록>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대한 교육부의 교과서 서술 지침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교과서 집필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교육 내용과 목표 등을 제시한 「사회과 교육과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의미를 상실한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그리고 교과서 집필방식 등과 관련된 세부 지침을 제시한 「2종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을 제공하였다. 이 세 자료는 검인정 교과서의 선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출판사 관계자의 표현처럼 교과서 집필에서 '바이블'로 여겨지고 반영되었다.⁶⁰⁾ 따라서 대공황에 대한 교과서 서술의 형식이나 내용이 여러 교과서들에서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된 연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침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이 중 「2종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은 집필방식 등에 대한 기준일 뿐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공황에 대한 교과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회과 교육과정」과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제

10학년, 즉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에는 총 10개의 주요 주제를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인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 시민'에서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⁶¹⁾

(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

- ① 근대 시민사회는 산업혁명을 통해 발전하였음을 이해하고, 산업혁명에 따라 정치, 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해한다.
- ② 자유방임주의적인 경제질서에서 나타났던 사회문제가 무엇이었으며, 그 해결 노력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주요 사건을 통해 이해하고, 현대 경제질서는 시장경제의 기초 위에서 복지사회를 추구하려는 것임을 파악한다.

60) 박인옥 외(2000), p.159.

61)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별책7].

- ③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탐구한다.

이 지침에 대해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⁶²⁾

②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를 통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상호 관계를 역사적 맥락에서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한 뒤 미래 한국 시민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탐구하도록 한다. 산업혁명의 역사적 사실 자체보다는 그것으로 인한 사회 변동, 예를 들면 중산층의 성장과 정부 권력의 제한, 자유방임주의 경제질서와 개인주의 확산 등을 유기적으로 설명하여 현대 시민사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상의 내용은 고등학교 교과서들의 대공황 관련 서술이 유사한 형식과 서술 방향을 갖게 된 배경을 보여준다. 첫째, 대공황 관련 내용을 수록한 단원의 명칭

인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전’은 『사회과 교육과정』에 수록된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둘째, 교육부의 지침이 ‘자유방임주의’로부터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노력이 국가의 개입처럼 시장 외적 요소를 통한 ‘복지사회의 추구’로 귀결되었다고 기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셋째, 학생들이 국가개입의 확대를 ‘역사적 맥락에서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 지침서가 대공황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거나 대공황에 대한 서술을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대공황이 다루어지는 맥락과 서술되는 방향을 상당 부분 규정한 셈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수록된 대공황에 대한 서술은 교육부의 사회과 교육과정 편수관들과 교과서 집필자들의 경제사에 대한 지식 혹은 국가와 경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견해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62)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 (4) 사회』, p.36.